
「2021-제2호(Vol. 10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3. 2.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2월) 2020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1년 전망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2021년 중국경제 키워드 4 	한국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 재정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국무회의 의결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일본의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 정령지정도시 재정특례에 대해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분석을 통한 재정 관련 문제 해결 	기획재정부 KDB미래전략연구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지방자치단체 자율·창의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한국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한국은행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13개 지자체 주민대상 시범 운영 각종 정부사업,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한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 과 ‘도약’ 의 주역으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1. 경제

출처

한국은행

■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2월)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3.0%, 2022년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며,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취업자수는 2021년 8만명, 2022년 18만명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021년 1.3%, 2022년 1.4%의 상승률을 보이며, 경상수지는 2021년 640억 달러, 2022년 62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임.

【 경제전망 】

구분	2020			2021			2022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0.7	-1.2	-1.0	2.6	3.4	3.0	2.5
취업자수(만명)	-6	-38	-22	-9	26	8	18
실업률(%)	4.3	3.6	4.0	4.5	3.6	4.0	3.8
고용률(%)	60.0	60.2	60.1	59.5	60.6	60.0	60.1
소비자물가(%)	0.6	0.5	0.5	1.2	1.4	1.3	1.4
경상수지(억달러)	190	562	753	330	310	640	620

[바로가기](#)

■ 2020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1년 전망

KDB미래전략
연구소

- (2020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2020년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70.6조원으로 전년 동기 95.6조원 대비 75.0조원 증가함.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이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9조원 증가한 113.0조원을 기록함. 직접금융규모는 57.6조원으로, 회사채 순발행 및 주식 발행 규모가 모두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13.1조원이 증가함.
- (2021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국내경제는 경제활동의 점진적 정상화, 정부의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①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②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지속, 한국판 뉴딜지원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자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③ 기업의 외부자금수요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④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간접금융시장 및 직접금융시장 전망) 2021년 간접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지속, 뉴딜정책 등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경기개선 기대감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나, '20년 수준의 급격한 대출 확대는 어려울 전망되며 대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선제적 유동성 확보, 회사채 순발행 기조 유지 등으로 보험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직접금융시장은 경기회복 기대, 우호적인 회사채 발행 여건, 공공기관 투자확대 계획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을 지속할 전망이다.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접종 현황) 2021년 2월 9일 기준 영국을 시작으로 EU,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
 - *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백신을 계약하여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8배가 넘는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접종 진행률은 회원국별로 상이함.
- (2021년 경제전망) 2020년 잠정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유럽 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2021년에 3.6~4.2% 회복할 것으로 보임.
 - * 백신 개발 및 접종 진행과 대유행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경제성장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백신 접종 지연, 백신의 불균등 공급 등은 유럽 및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 요인임.
- (백신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접종 우선순위 확립을 통한 혼란 최소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백신 기피현상 방지, 여행 재개를 위한 백신 여권 도입 논의 등이 필요함.

[바로가기](#)

■ 2021년 중국경제 키워드 4

한국개발연구원

- (2020년 중국경제) 2020년 중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이 6.5%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중국의 연간 GDP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대부분의 주요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수치이자 생산(2.8%↑), 수출(1.9%↑), 고정자산투자(2.9%↑)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이어서 2021년 경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음. 다만, 소비(3.9%↓)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 중국경제의 주요 정책목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 (2021년 중국경제) 2021년 중국경제는 내외환(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의 트랩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자국 기업)를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외부변수(① 코로나19 재확산, ② 새로운 미중관계)와 내부변수(③ '14.5' 계획, ④ 디지털 위안화 시행)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2021년 중국경제의 변수)
 - ①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은 2021년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외생변수가 될 전망이다.
 - ②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될 '14차 5개년 개발계획(14.5 계획)'은 수출 의존적인 기존 경제구조를 탈피(미중 갈등 관련)하고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전망이다.
 - ③ 올해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될 전망으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유통을 추진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새롭게 설정되는 미중 관계의 방향은 한국경제 및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바 우리의 입장에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기획재정부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국무회의 의결('21.3.2.)

- (추진배경)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및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을 위한 방역소요 뒷받침 등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마련 불가피
- (기본방향)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① 추경편성과 ② 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 (총 규모) 19.5조원(690만명)

【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구분	세부내용
추가경정예산안 (15.0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564만명)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① 고용유지 지원 0.3조원 ②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조원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방역대책(4.1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②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0.7조원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기정예산 활용 (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 22만명)	
	고용지원(1.8조원 14만명)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0.2조원 10만명)	

- (재정 총량 변동)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4.2조원 적자 확대, 국가채무는 9.9조원 증가함.

[바로가기](#)

■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KDB미래전략
연구소

- 연준은 '21년 1월 정례 FOMC(1.27~28)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0~0.25%)으로 동결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월 1,200억 달러(국채 800억, MBS 4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반등이 전년도('20년)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 크며,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발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테이퍼링 등 긴축정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연준이 '20년 3월 이후 1년 가까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였음에도 '20년 4분기 들어 경기 회복 지연 조짐이 포착되며 재정정책 강화 여론이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연준 총자산은 '20년 2월 4.16조 달러에서 '21년 1월 7.40조 달러로 77.8% 증가
-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 가능성을 높임.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일본의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 정령지정도시 재정특례에 대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일본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252조 19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를 가리키는데, 대도시 행정의 합리성, 능률적인 집행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을 통해 ①사무배분, ②관여, ③행정조직, ④세재 및 재정 등의 각 부분에 있어 일반 도시와는 다른 특례가 인정됨

- (들어가며)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 차원의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 47개 각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재해 관련 지원제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정령지정도시가 갖는 4가지 특례 중 세재 및 재정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고자 함.
- (재해 관련 지원제도)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경제 및 생활면, 거처 확보 및 재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원)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차원의 지원제도(자연재해 복구 및 주민생활 재건을 위한 독자적 시책)가 있음.
- (정령지정도시 세재 및 재정상의 특례) 대도시에 어울리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세, 국가 및 도도부현지출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취급, 복권, 도로특정재원의 양도 및 교부금 등의 증액 조치가 이루어짐.
-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특례제도가 정령지정도시의 세수 증가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지만 극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장기적인 재정악화에 허덕이고 있고 정령지정도시도 예외는 아님. 한국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의 문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바로가기](#)

■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분석을 통한 재정 관련 문제 해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서론) 1995년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와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와는 달리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됨.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지방자치제도를 더 잘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운영 방식이나 재정 관련 제도들을 분석해 본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임.
-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 ① [독일정부의 구조 및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 독일은 총 16개의 구성국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지방자치제도는 연방기본법상 보장된 권리임. 연방기본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을 가지며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 및 세율결정권이 부여됨.
 - ② [재정조정제도] 독일은 연방기본법 및 재정조정기준법에 따른 재정조정제도를 두어 각 주의 상이한 재정능력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규정함. 2020년부터 개편 적용되는 연방조정제도는 각 주에 할당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에 재정력측정치와 조정측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정력조정제도임.
- (결론) 독일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례시에 재정특례를 주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임. 독일의 행정체계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1.2.17.)

법제처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1.2.17.)

법제처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 '20.2.4. 시행 '21.2.5.)

법제처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제정 '20.2.5. 시행 '21.2.5.)

법제처

- 「수소법」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절차 및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제정 '20.2.5. 시행 '21.2.5.)

법제처

- 「수소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3호, 2021. 2. 5.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수소용품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개요)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및 과정을 분석해 봄.
- (현황) ①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 및 사업 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② 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편성에서의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고, 사회보장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지방비 소요 정보가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③ 기준보조율의 체계성이 미흡하며 차등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쟁점 분석)
 - 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체계성 분석] 정부는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②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관리의 효과성 분석]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지방비를 중·장기적으로 추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③ [국고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분석] 기준보조율의 사업별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차등보조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력과 사업 수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개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이 제안되었으며, 민간자금을 뉴딜분야에 투입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leverage effect)의 과정에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뉴딜펀드 신뢰 확보방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나가며)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민관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자율·창의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 (기존 국고보조사업 개선책을 넘어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향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패키지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기획의 창의성·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기존의 중앙부처 중심의 운용·관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의 창의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자치분권 혁신 플랫폼 기반으로의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 방안)
 - 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메뉴판 공시제도] 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지방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
 - ② [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장기 차원의 중간조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자치단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의 활용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중심의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지원 활용 검토 필요
 - ③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 부처별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사업”을 패키지 사업으로 수행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협약제도를 활용하여 행안부의 운영주체, 중앙부처의 참여 형태의 사업설계 필요

[바로가기](#)

■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 (서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더 이상 관련 분야 연구자나 시민 활동가들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규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 중 기후변화 대응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2020년 11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함.
- (국내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배출 특성 분석과 정책수단 현황) 서울의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대부분은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어,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2010년대 초반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미세먼지 10대 대책,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 건물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시행해왔음.
 - * 해외 건물·운송부분 경제적 수단 사례분석: 전문 참조
- (이해관계자 인식과 정책 수용성 분석)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서울의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폭염과 한파, 대기정체, 외부 오염물질유입 등 외부요인과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명령통제 방식의 정책수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와 안정적 기후와 같은 공동의 자원(공공재)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공공재의 가치(또는 반대로 공공재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②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기반 자동차세 도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검토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혹은 봉쇄조치(lockdown)가 보편적인 방역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제약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그 부정적 영향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미치고 있음.
- (봉쇄조치 시 근무가능지수 산출)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하고,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대면접촉 일자리에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임금손실 및 소득분배 악화)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되는 임금손실률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평가)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조치(행정적·자발적 방역)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평가되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보다 선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에 의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바로가기](#)

■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최근 디지털 유통채널 발달 등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구독경제는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기구독 모델(신문·잡지 구독, 정수기 렌탈, 우유 배달 등)을 기반으로 하지만, 온라인 상거래,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 등으로 기존 정기구독 모델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영역 확장 중이며, 차별화된 소비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가 아닌 '사용'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금융업계에서도 구독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의 일부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들이 월정액 수입료 모델을 도입하고 있음.
 - * Ernst&Young은 앞으로 5년 이내에 금융서비스에서도 구독경제 모델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19년)
 - * 미국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영역에서 월정액 방식의 구독 서비스 제공, 독일, 영국 등은 무료 계좌 개설 및 월정액에 따른 차등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 국내의 구독경제 기반 금융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소비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신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고려할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은행

KDB미래전략
연구소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한국은행

-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민간분야의 디지털화폐 확산 등에 따라 전통적인 법화의 형태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66개 중앙은행에 대한 BIS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일정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적) 기술발전을 법화제도에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CBDC에 대한 검토는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전제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용자 관점에서의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CBDC의 법적 성질) CBDC의 법화성 논의는 국내법적 취급의 기본원칙을 확보하고, 사업상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상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취급기준을 확보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음. 이에 제도 설계 시 법화라는 공법상 제도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CBDC의 발행, 이전, 금융범죄, 집행법,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참조
- (CBDC의 입법 방향)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함.
- (결론) CBDC와 관련하여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CBDC는 법화로서 발권력 및 강제통용력에 있어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하며, 둘째,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CBDC이전에 관하여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셋째, 디지털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a03a7eb2f4046e1d3c76772003e549ea_img.jpg\)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7조원이며, 이월액 2.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함.
 - ① 총세입은 465.5조원 징수, 전년 대비 63.5조원 증가, 예산대비 5.5조원 증가
 - ②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8조원 중 453.8조원 집행(98.1%), 전년 대비 56.6조원 증가
 - ③ 이월은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 ④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로 일반회계 5.7조원, 특별회계 3.6조원임
 - ⑤ 불용은 6.6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1.3조원 감소

[바로가기](#)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2.5~2.9일,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힘.
 -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①경제활동, ②교육·직업훈련, ③복지·문화)로 구성되고,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임.

[바로가기](#)

■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26.(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함.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17개 시도의 자체 지역균형뉴딜 계획 수립 완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재정 인센티브 지원, 뉴딜펀드 자금 투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29개 법률)에 대한 논의와,
- 소상공인·중기 금융지원 등 10개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13개 지자체 주민대상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됨.
- 이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됨.

[바로가기](#)

■ 각종 정부사업,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한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홍성군, 당진시,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총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힘.

【사업 시범 6개 자치단체】

자치단체명	사업 내용
화성시	교육 + 자치 + 재생을 연계하여, 새로운 화성, 협치에 기초한 지역사회 구축
홍성군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당진시	도농복합지역의 장점은 살리고, 지역별 격차는 완화하는 맞춤형 접근
순천시	교육이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주도 공동체를 육성하는 성장 동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유기적 결합 시도
곡성군	돌실어울림센터 지속운영방안 마련 및 교육기반 확충
의성군	‘청년이 찾는 안계,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의 토대 구축

- 개인 일상과 밀접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치, 복지, 재생,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관련 중앙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융합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지역 내 각종 정부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하게 됨.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여 1개 자치단체당 1억 원의 국비가 투입·지원될 계획임.

[바로가기](#)

■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7일(수)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고,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며,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바로가기](#)